

이재명, '비호감도 해소·국가 지도자급 리더 부상' 과제

제21대 대선출마 공식 선언

20대 대선 이후 사법리스크 시달려 비명계 주자, 네거티브 공세 전망 지지층 확장해 혼란·갈등 잠재워야
'잘사니즘' 기반 중도보수층 공략 국가위기 극복 수단으로 AI 꽉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당내 경선을 거치며 '인물' 리스크에 맞서 비호감도를 해소하고 지지층을 중도 보수층까지 확장해 국가 지도자급 리더로 부상해야 한다는 과제가 가장 시급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지난 20대 대선에서 시종일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각종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며 보수 진영에서 '부패 정치인' 취급을 받았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네거티브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잘 방어하지 못하면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지지층을 확장해 50% 이상의 득표율로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야 추후 사회적 혼란과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
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며 "극복의 수단은 AI 대전환 시대에서의 AI 산업의 육성,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이 과반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를 기록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2%,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2%,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각 5% 순이었다. 태도 유보나 모름·무응답은 2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4.9%(총 4019명과 통화해 그 중 1001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치러진 5번의 대선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18대 대선의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 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문 전 대통령은 과반 득표율을 하지 못했다. 이 대표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원인을 '양극화'로 꼽은 만큼, 중도의 마음을 흔들어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받아야 국가 지도자급 리더십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선 이 전 대표가 독주할 것이라는 관측이 자배적인 가운데, 본선에선 '먹사니즘'과 '잘사니즘'

을 기반으로 한 'K-이니셔티브'를 기조로 중도 보수의 마음을 흔들 공약을 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금껏 지켜왔던 가치와 상충하는 공약들이 나올 수 있어 이 대표 측 입장에선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 영상에서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좀 더 가치 지향적이고 좀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장"이라며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을

놓고 실제로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게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정책이 누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며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부연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관되게 이 대표에게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소통과 통합의 바탕 위에서 민생과 경제 위기를 극

한동훈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 이길 것"

제21대 대선출마 기자회견

배신자 낙인에 보수진영 지지 '우려'
4년 중임제·양원제 도입 개헌 추진
미래성장 2개년 계획 입안 등도 제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권 레이스에 가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 분수대 인근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맞서 싸워 이길 후보는 자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건강한 당정관계'를 두고 각을 세워왔는데,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보수 진영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 전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며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우리가 평화롭게 누려온 일상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다.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4년 중임제·양원제 도입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22대 대선을 23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고 21대 대통

령은 22대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주요 국정 구상으로 ▲미래성장 2개년 계획 입안 ▲미래전략부 신설 ▲AI3대 강국·초격차 5대 산업 분야 육성 ▲5대 메가폴리스 구축 ▲근로소득세 인하 ▲경제 나토(NATO) 창설 등을 제시했다.

한편, 반도체 전문가인 개혁신당의 양향자 전 의원은 이날 대선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임원인 양 전 의원은 "보수정당을 경제, 첨단산업, 미래에 관한 신보수정당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과학기술 힘으로 뉴 보수의 길을 함께 가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의회에서 퇴임 연설을 하고 대선 준비를 본격화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김기현 전 원내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선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1차 경선서 4인, 2차 경선서 2인 선출"

대선후보 경선 일정·방식 확정

1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2차, 당심 50%·민심 50% 반영

국민의힘이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과 방식을 확정했다. 1차 예비경선(컷오프)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차에서는 본경선에 오를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기 위해 당



심·민심 각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결선은 양자 구도로 치르게 되는데,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양자 결선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

선안을 의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사진)은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후보자 선출방식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4인을 선출한다"며 "2차 경선에서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2인을 선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3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최종 1인을

선출한다"며 "단, 4인 경선에서 한 후보가 50%를 넘으면 2인 경선을 하지 않는 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를 한 것은 오픈프라이머리라든지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민심 눈높이에 맞는 후보들이 4인 경선으로 갈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인 경선과 2인 경선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국민 여론조사 50%를 했는데, 당원과 민심을 고루 반영하

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부연했다.

선거인단 현장 투표는 실시하지 않으며, 권역별 합동연설회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개최하지 않는다.

아울러 당원 선거인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책임당원뿐 아니라 최근 1년 내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역선택 방지 조항도 기존대로 모든 경선 조사에서 적용한다.

한편 국민의힘 선관위는 오는 11일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syj@